

저탄소 녹색소비와 친환경상품 정책



문 승 식

친환경상품진흥원 구매진흥국장
☎02-2085-0095 ecomark@hanmail.net

〈필자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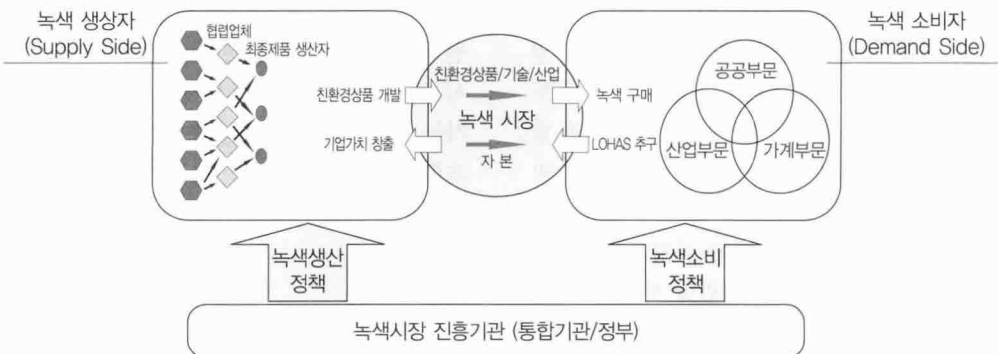
-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졸업, 영국 Aston Business School MBA 수료
- 환경마크협회 기획실장, 친환경상품진흥원 경영기획장, 구매진흥국장

1.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생산·소비

‘성장의 세기’ 또는 ‘경제의 세기’로 정의되는 20세기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던 성장위주의 체제는 무절제한 소비증가를 부추겨왔다. 미국 학술원이 발간한 “Tracking the Ecological Overfoot of the Human Economy”에 따르면 인류의 집합적 수요는 1980년쯤 지구의 재생용량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1999년에 지구용량을 20%까지 초과하였다(Wackernagel, 2006). 인류는 지구의 자연자산을 과도하게 소비하여 과도한 수요를 충족하여 결과적으로 거품경제를 만들고 재앙적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구용량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는 인류 모두의 노력없이 불가능하다.

때마침 대통령께서 지난 8. 15 경축사를 통해 저

[그림 1] 저탄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 개념





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생산과 저탄소 녹색소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때 달성될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제체질을 환경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로 바꾼다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고, 환경기술 발전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저탄소 녹색소비정책에 대하여 살펴 보되, 우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성과를 짚어보고 저탄소 녹색소비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정책

국내 친환경상품 정책의 효시는 환경마크제도이다. 1992년 4월 환경처의 고시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4년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공공 우선구매제도를 채택하였

으나, 녹색시장 확산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법률도입 당시 132억원이었던 공공 녹색구매 금액은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2,55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수준이었다. 생산자들은 친환경상품을 생산해도 소비자들이 이를 외면한다고 탓하고,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녹색상품을 만들지 않아 구입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하여 연간 50조원으로 추정되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지렛대로 삼아 녹색성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2004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듬해인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3만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토록 한 것으로, 공공녹색구매 금액은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 시행 불과 3년만인 2007년에 공공녹색구매 금액은 1조3천4백억원으로 2004년 대비 무려 5배나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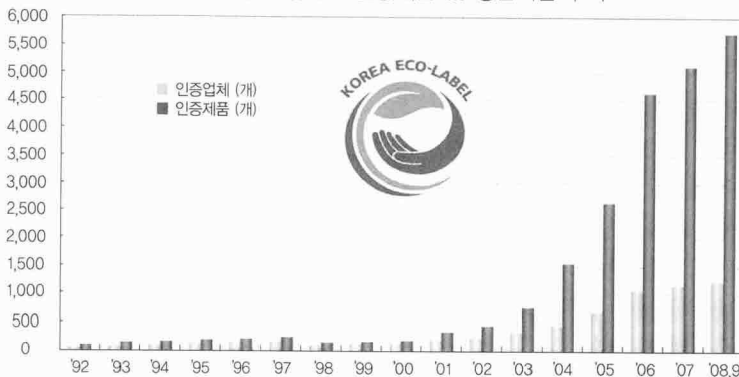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녹색상품 수요증가에 따라, 친환경

[표 1]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2,626	2,549	7,870	8,616	13,437
국 가 기 관	928	992	3,396	2,839	3,568
자 치 단 체	1,413	1,272	3,776	4,848	8,172
정부투자기관	76	108	231	379	565
정부산하기관			300	306	476
지방공사 및 공단			70	125	485
출연연구기관·연구회	209	177	58	71	118
국공립대학병원 등			39	48	52

[표 2] 연도별 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생산기업 추이



※자료 : 친환경상품진흥원(2008)

[표 3] 공공구매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계	계	2005. 7~12	2006	2007	2008. 9
CO ₂ 저감(톤)	1,224,232	108,475	315,862	495,096	304,799
나무식재효과(그루)	11,029,235	977,300	2,845,641	4,460,357	2,745,937
경제적 편익(백만원)	18,517	1,641	4,778	7,488	4,610

※자료 : 친환경상품진흥원(2008)

상품 생산도 크게 성장하였다. 환경마크제품 생산규모는 2004년말 4조78백억원에서 2006년말에 14조5천억원(GDP의 1.8%) 규모로 3배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환경마크 인증제품 숫자도 친환경상품법이 도입된 2004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 2008년 10월 현재 1,220개 업체, 5,722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매우 크다. 이 때문에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책과제로 녹색소비를 선정하고 있다. 우리보다 4년 앞서 그린구입법을 도입한 일본은 공공녹색구매를 통해 2006년에 89,588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였다(일본 환경성, 2008a).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¹⁾ 친환경 에너지제품만 갖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22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생 소나무 약 11백만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편익도 1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은 공공녹색구매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제조 및 유통업체 등 100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산업계의 녹색구매 성과도 녹색구매 표준가이드라인의 사내규정화 등에 힘입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구매한 녹색구매 금액은 2006년도에 1,680억원에서 2007년에는 2,015억원으로 약 20%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소비자의 저탄소 녹색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규모 유통매장(1,000㎡이상) 387개소에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코너를 설치토록 하는 등 녹색유통 인프라구축을 강화하였다.

3. 저탄소 녹색소비촉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녹색구매 정책은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저탄소 공공녹색구매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로하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단계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녹색소비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대책을 녹색구매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공개하는 환경배려촉진법을 시행하고 있고(일본환경성, 2008b), 영국은 녹색구매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별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줄여나가고 있다(HM Government,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2007년에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친환경 에너지제품은 금액기준으로 33% 수준인데, 이를 전량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매한다면 연간 약 1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제품 정보제공과 구매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관련제품을 환경마크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에 다양한 저탄소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조달청에서 구매중인 에너지 관련제품은 총 83개 품목이나 현재는 이중 31개 품목만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2개 품목 중 구매금액이 큰 품목을 집중 검토하여 환경마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물건을 소유하고 빠르게 소모해버리는 것보다는 유지·보관·공유하는 데 가치를 두도록 함

1) 공공기관은 조달청을 통하여 약 65%의 물품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자체구매하고 있다.



[표 4] 조달청의 에너지 관련제품의 친환경상품 구매현황

구 분	총 에너지관련제품구매(A)	환경마크 품목		비율(C/A)
		구매가능규모(B)	녹색구매실적(C)	
금액(억원)	24,860	22,290	7,400	33%
품목(개)	83	31	23	28%

*자료 : 조달청, 친환경상품진흥원(2008)

으로서 저탄소 녹색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되, 생산자는 제품 기능(function)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원소비량을 줄이고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리스나 렌탈, 카셰어링, 농기구 공동이용 등 제품의 서비스화(product-service system)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아래 표는 제품의 서비스화와 관련된 해외의 성공사례이다.

끝으로,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저탄소 녹색소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실 소비자의 로하스적인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이 저탄소 기술 개발만으로는 기후변화나 지구환경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연비를 20% 향상시킨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하였다손 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 차는 환경친화적이어야' 라는 마음에서 자동차를 30% 더 타고 다닌다면 기술개발 효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실제로 기술개발로 에너지 집약도는 1970년 대비

20%이상 개선되었으나, 1인당 CO₂ 배출은 오히려 1.6배나 증가하였다(IPCC, 2007). 이제는 환경을 배려하지 않은 소비습관에서 벗어나 환경부담을 최소화시키며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본 環境省 (2008). 2006년도 그린구입에 따른 환경부하 저감효과

일본 環境省 (2008). 환경배려촉진법

친환경상품진흥원 (2008). 「2008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자료집

HM Government (2005). Securing the future; delivering 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PCC (2007). IPCC AR4 Synthesis Report.

Mathis Wackernagel (2006), 'Ecological Footprint Accounting-Comparing Earth's Biological Capacity with an Economy's Resource Demand'. The Future of Sustainability. Springer Netherlands

[표 5] 제품의 서비스화 사업 성공사례

사업명/기업명	사업내용	이점	환경편익
Evergreen Lease 시스템/ Interface	카펫을 제품으로 판매하는 대신 서비스로 대여하고, 유지·수선·사용 후 회수 처리	초기 카펫 구입비용 불필요 및 매달 사용료 지급	폐기물 100% 회수·처리 및 재사용(자원이용 극대화)
자원순환시스템/ 후지제록스	사용후 회수제품은 부품별 분리하여 재생품화	신제품 대비 제조단계 CO ₂ 30%, 자원소비량 40% 절감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유효자원 재이용
밝음안심서비스/ 마츠시타전기	형광램프 대여·사용 후 회수처리 (사용자는 사용·유지만 관리)	폐기물 적정 회수·처리 및 관련 업무 경감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유효자원 재이용
환경 Delivery Pack /Starway(주)	재사용·재활용 가능 포장상자의 사용·운송·포장작업·관리·환경 데이터의 제공	포장재 비용·재료 절감	포장비용 55% 절감 (포장재료 2/3 절감)
절수 ESCO /주)INAX	화장실 보수 공사시 절수기 도입 및 포괄적 서비스 동시 제공 (절수효과 보충서비스)	건물주 비용 절감, 쾌적성 향상	10층 건물 기준 절수효과 9,500m ³ /년(수도요금 45%) 절감